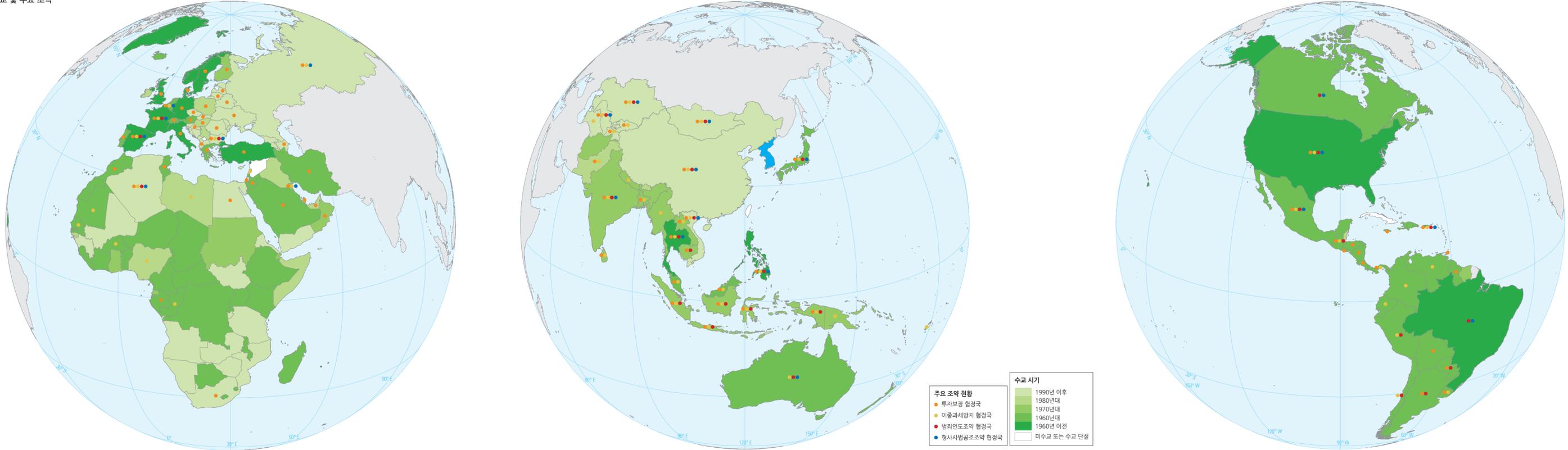


세계 속의 한국

국제 관계

수교 및 조약

수교 및 주요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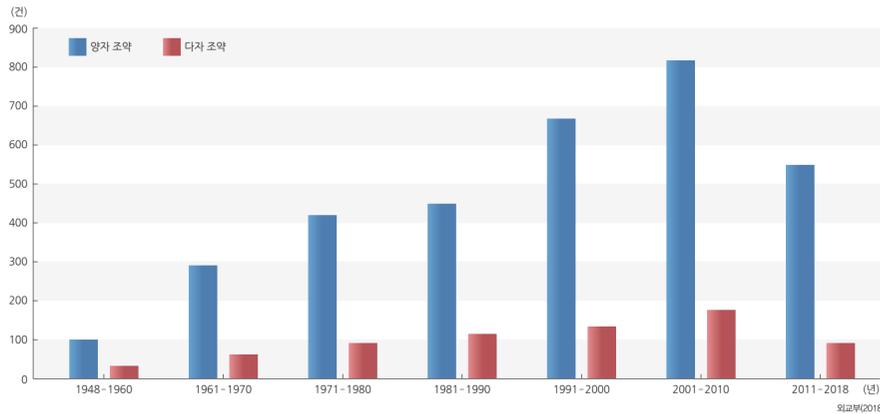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지구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국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수교에 대해 살펴본다. 수교의 시간적 추이를 분석함은 물론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주요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설립한 재외공관을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재외 동포를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 체류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분포도 알아본다. 해외 이주 신고자를 수민국별 그리고 형태별로 나누어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본다.

기구 그리고 정부 간 기구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지한 국제기구들과 이들의 국내 분포를 살펴본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우선 유엔

엔 정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유엔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조약 건수 추이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국내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타개해 내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하는 양자 또는 지역적 FTA 체결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들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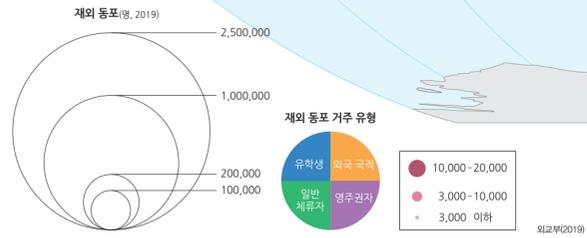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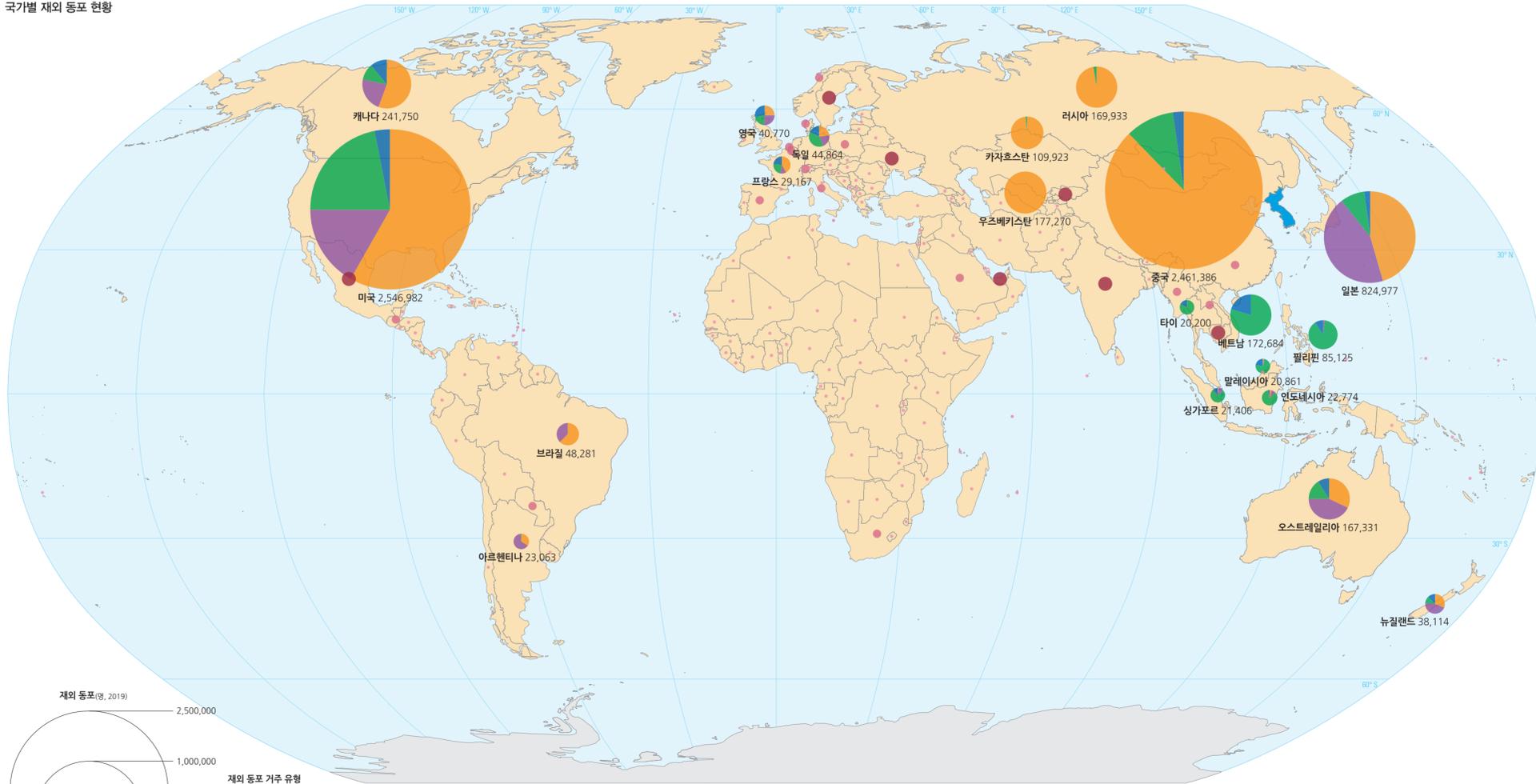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 외교의 중요성이 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유엔과 유엔 산하 전문 독립

외교부(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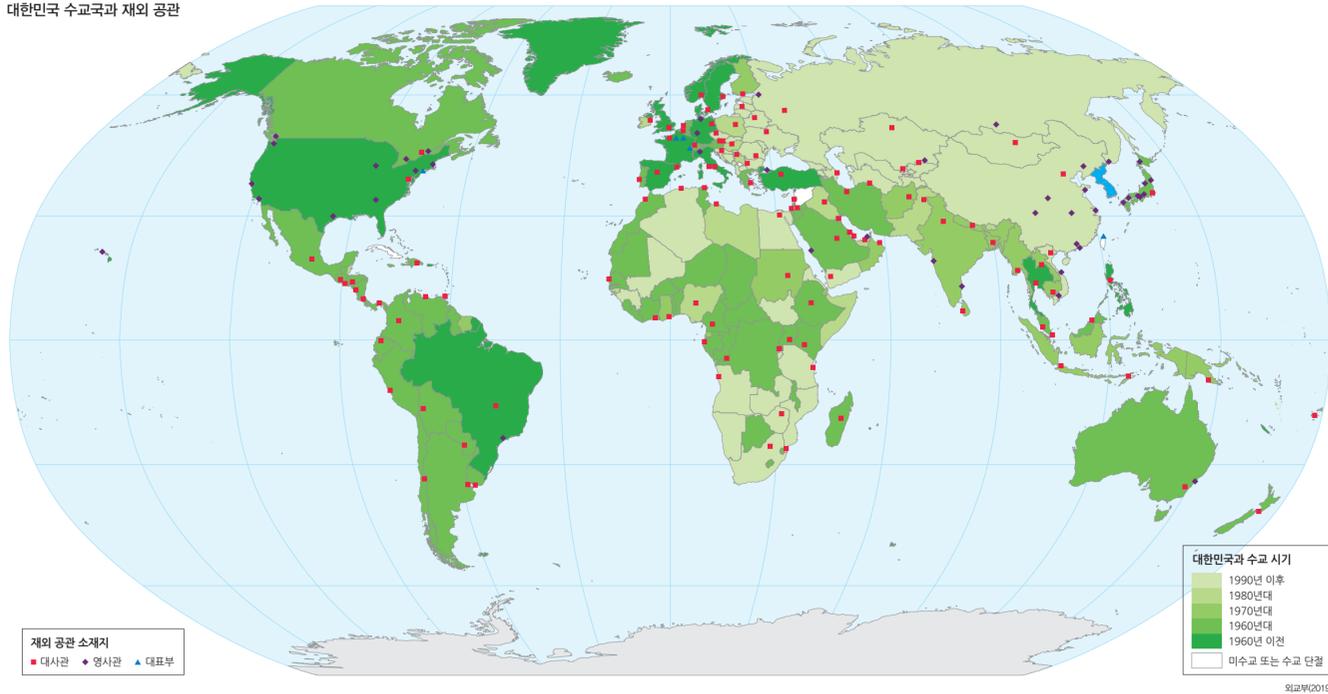


동포 및 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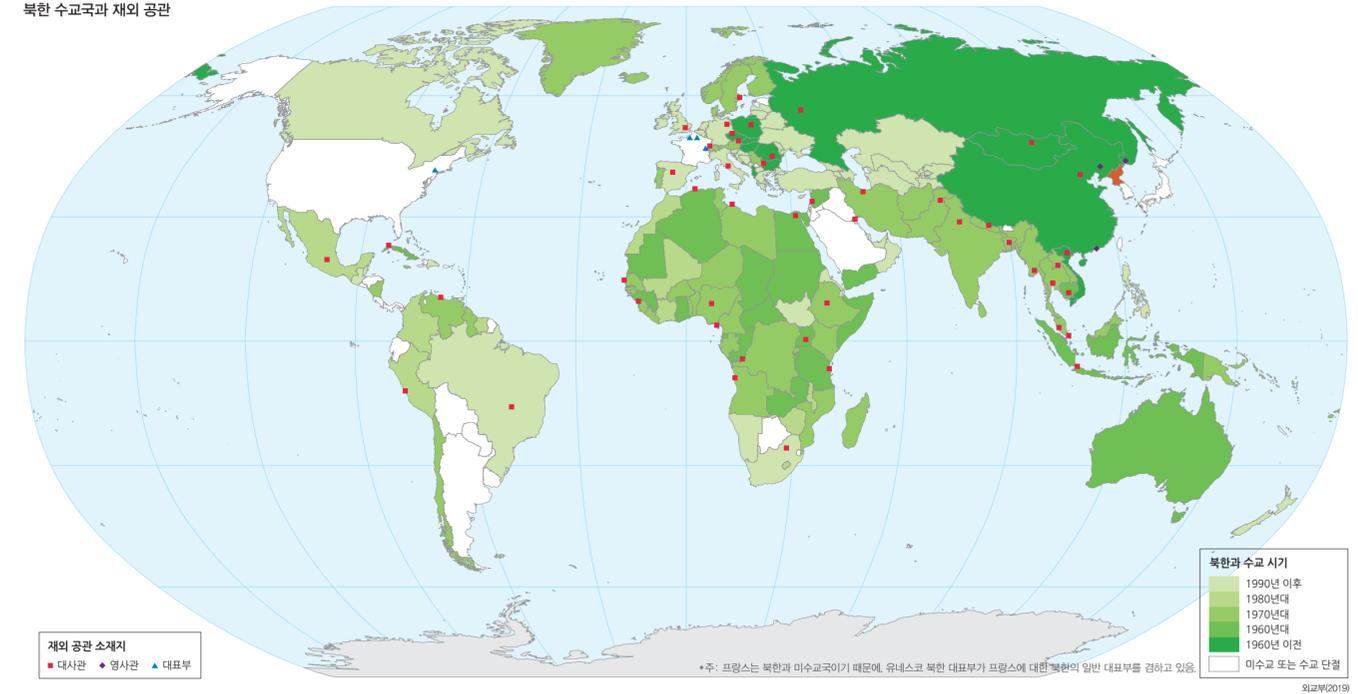
국가별 재외 동포 현황



대한민국 수교국과 재외 공관



북한 수교국과 재외 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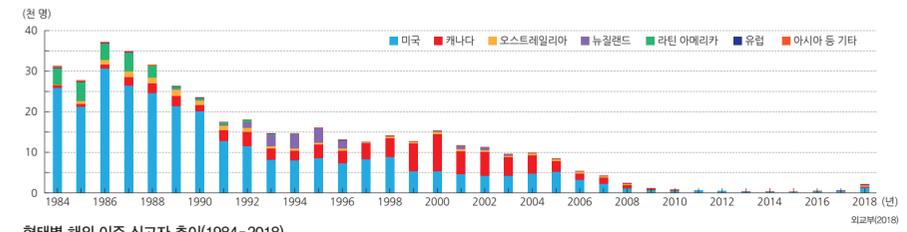
지도는 재외 동포의 국가별·유형별 분포를 보여 준다.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나 현재 거주국의 시민권을 가진 외국 국민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재외 국민은 다시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 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자료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 공관에서 작성한 공관별 재외 동포 현황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 자료, 한인회 등 동포 단체 조사 자료, 재외 국민 등록부 등 공관 민원 처리 기록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이다. 이 자료는 재외 동포 지원, 보호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재외 동포 수는 1991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수교로 조선족이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로 완만히 상승하여 2019년 현재 재외 동포는 749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재외 국민은 103만여 명의 영주권자, 136만여 명의 일반 체류자, 29만여 명의 유학생으로 구성되며, 외국 국민은 약 481만여 명이다.

재외 공관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수도에 설치하는 대사관,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 재외 국민 및 재외 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보호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총영사관으로 구분된다. 지도의 재외 공관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 중 189개국 및 유엔 비회원국 바티칸 시국, 쿵 제도과 수교하고 있으며, 외교가 단절되었던 타이완과도 비공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수교국 191개 중 115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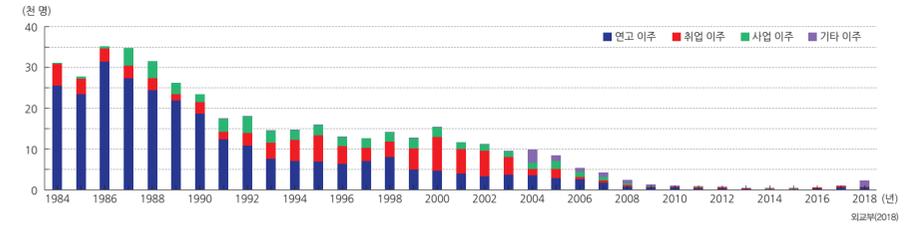
개의 총영사관과 5개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 재외 공관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들 지역 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 및 중국과 밀접한 경제, 사회,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많기 때문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 재외 공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외환 위기 직후 정부의 구조 조정 여파로 22개 재외 공관이 폐쇄되어 그 수가 줄었으나, 외교 업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였다. 이렇듯 재외 공관의 숫자는 외교 수요 및 국가 경제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은 북한의 재외 공관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2019년 현재 북한은 47개의 상주 대사관, 3개의 총영사관, 4개의 대표부를 유지하고 있어 그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인다.

그래프는 수민국별 그리고 형태별 해외 이주 신고자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 준다.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이주 신고자가 1984년 31,111명에서 2018년 2,2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자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대내외로 인식되면서 해외 이주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미국 이외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중이 늘어났다. 해외 이주 신고자를 형태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연고 이주(초청)가 가장 많고, 취업 이주, 사업 이주 순이었다.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해외 이주 신고자 추이(198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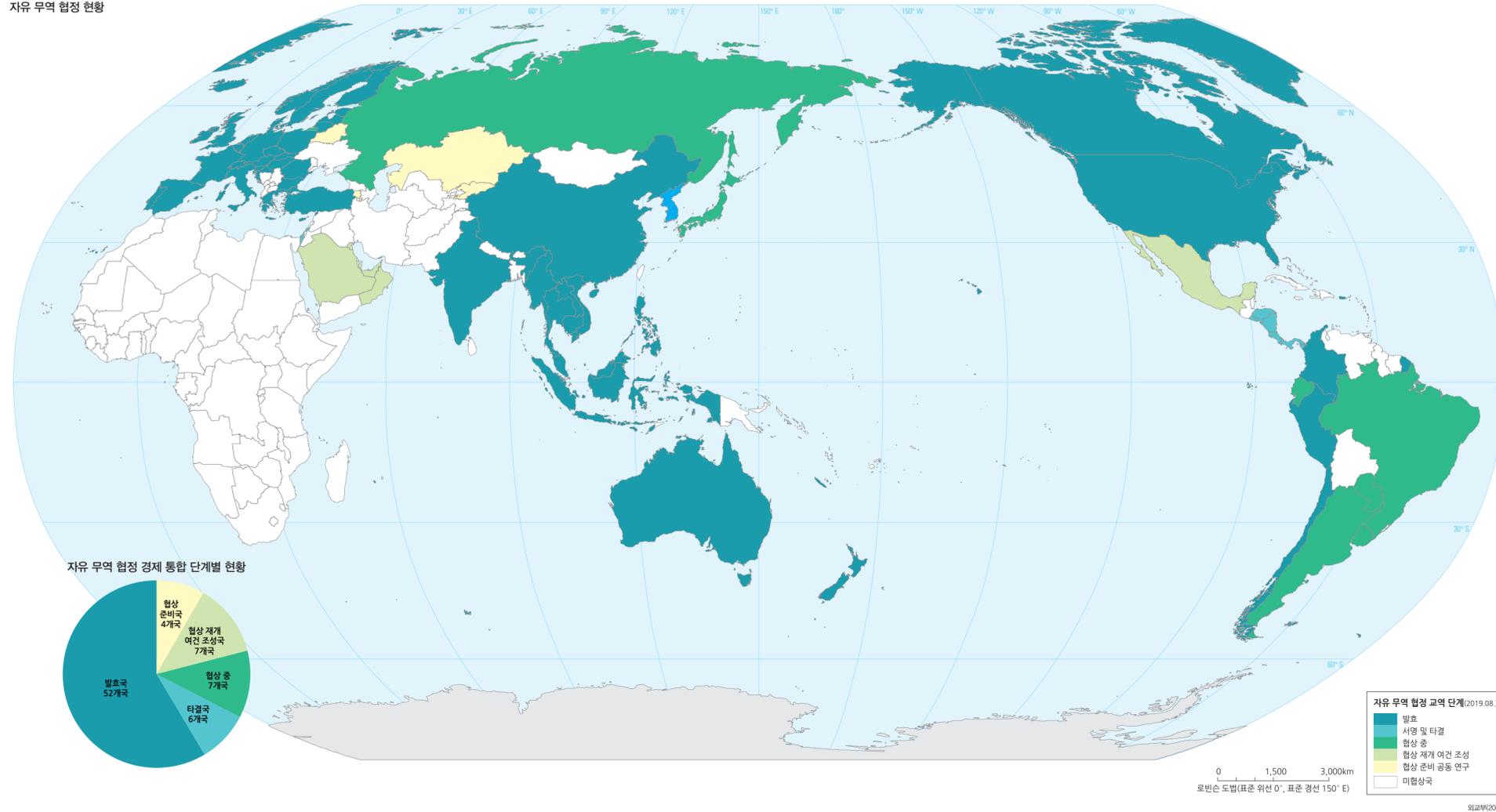


형태별 해외 이주 신고자 추이(1984-2018)



자유 무역 협정(FTA) 및 지역 협력체

자유 무역 협정 현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체결된 이후 기존 다자주의와 더불어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다자주의에 양자주의를 병행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첫 자유무역협정 대상 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5년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2003년 2월에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의 거점인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과 2005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2019년 4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발효된 국가는 아세안(ASEAN) 10개국, 인도, 유럽연합(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이다.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 등 중앙아메리카 5개국과 이스라엘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는 한국·중국·일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6개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5개국,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이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할 여건을 조성 중이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국가는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국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할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주요 경제 권역 내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걸프협력이사회 등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G20 정상회의·재무장관 회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 등 다양한 지역 협력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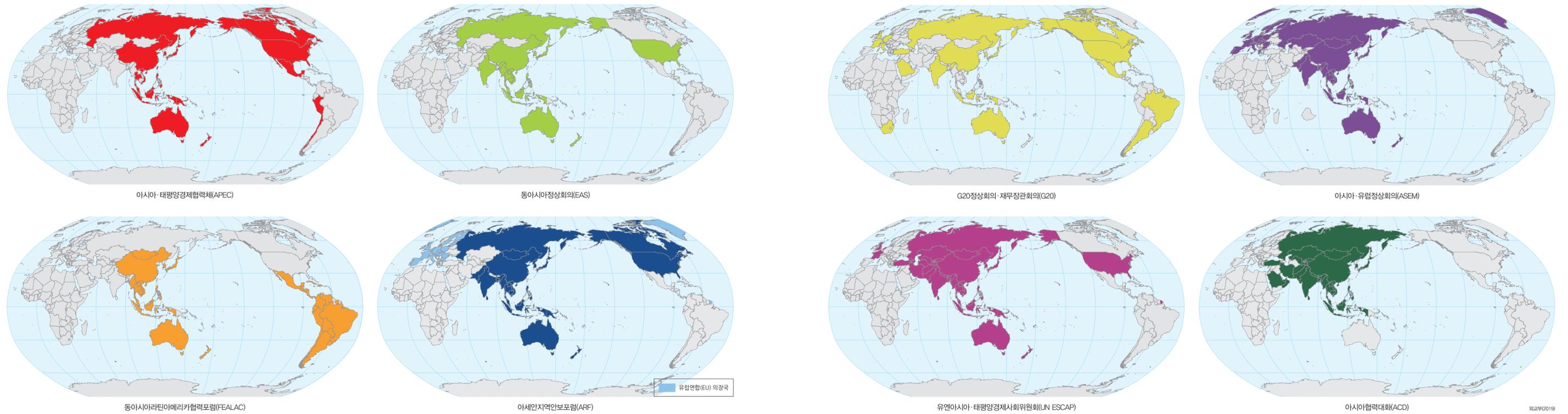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우리나라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협력체의 제도적 기틀 마련과 새로운 회원국 충원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중 상대적으로 연세상이 미약했던 아시아·유럽 간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공식화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간 경제 협력 확대 외에도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정치·안보 대화 증진, 사회·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앙 및 남아메리카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의 일원이기도 하다.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 협력 달성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협력대화(ACD)의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통화 질서(이른바 'Bretton Woods II' 체제) 수립을 위해서 G7,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G20 정상회의·재무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의 일원이기도 하다.



지역 협력체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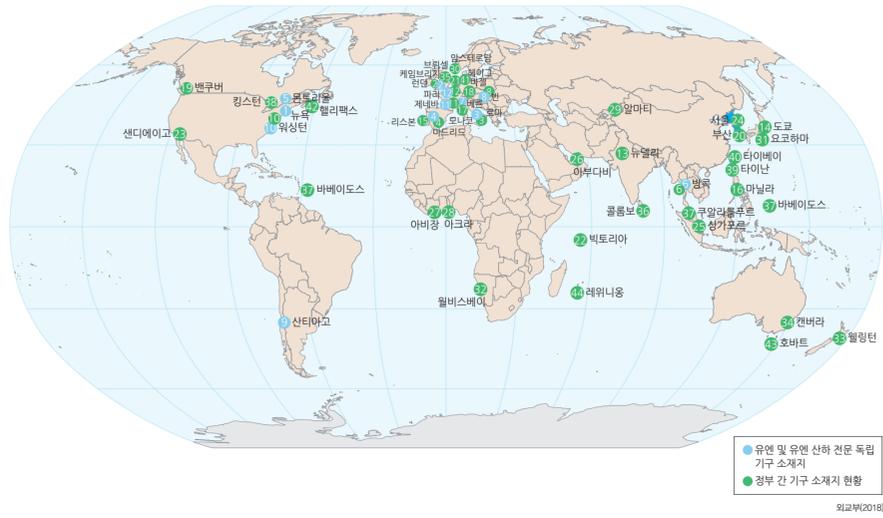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2	런던	국제동물보호위원회(IGC)	1953	11	제네바	국제식물신종보호연맹(UPOV)	2002
		국제어동양성기구(MSO)	1985			세계동물보전기구(OIE)	195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0			국제도량형국(BIPM)	1959
3	로마	국제유류유염보상기금(OPC Funds)	1998			국제평양소화성아류위원회(INPAFC)	1961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CCROM)	1968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0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4	마드리드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OECD개발센터(DEV)	1991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197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국제에너지기구(IEA)	2002
6	방콕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OCCAT)	1970			국제핵융합에너지기구(ITER)	2003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1950			국제교통포럼(ITF)	2007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약체(APT)	1979	자급세탁방지국제기구(FATF)	2009		
8	빈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2010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1996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963		
		국제연화자문위원회(ICAC)	1954	아시아-아프리카개발자문기구(AALCO)	1974		
10	워싱턴	국제전기통신통신기구(ITU)	1967	아시아생산지구(APO)	1961		
		지구환경금융(GEF)	1994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2015		
		미주개발은행(IDB)	2004	국제남-아연연구그룹(ILZSG)	1987		
11	제네바	국제교육국(BIE)	1962	아시아-태평양양평면연구기구(APPU)	196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동부지역공공환경기구(EROPA)	1962		
		국제무역센터(ITC)	1964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국제의회연맹(IPU)	1964	국제수리기구(IHO)	1957		
		섬유수출제도기구(ITCB)	1984	국제결제은행(BIS)	1997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와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가입 현황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1	뉴욕	국제연합(UN)	1991	8	빈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2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1962	9	산티아고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07
3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0	워싱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78			국제통화기금(IMF)	1955
4	마드리드	세계관광기구(UNWTO)	1957			국제개발협력기구(IDA)	1961
5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국제금융공사(IFC)	1964
6	방콕	유엔이태경계사위원회(ESCAP)	195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1967
7	베른	만국우편연합(UPU)	1949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8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세계보건기구(WHO)	1949

유엔(UN)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우리나라 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1949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만국우편연합(UPU),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해 왔다. 지도에 표현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총 26개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91년에는 유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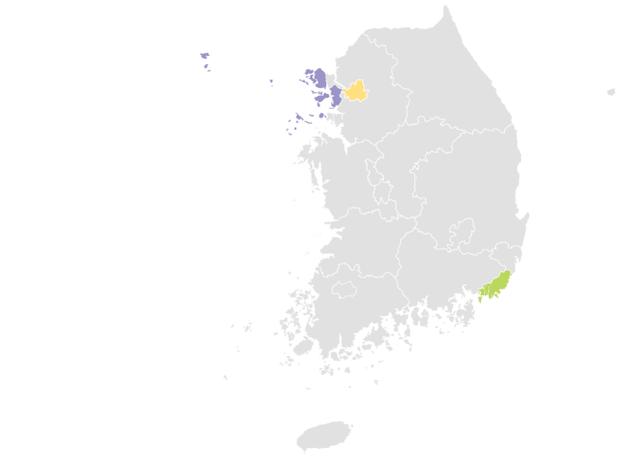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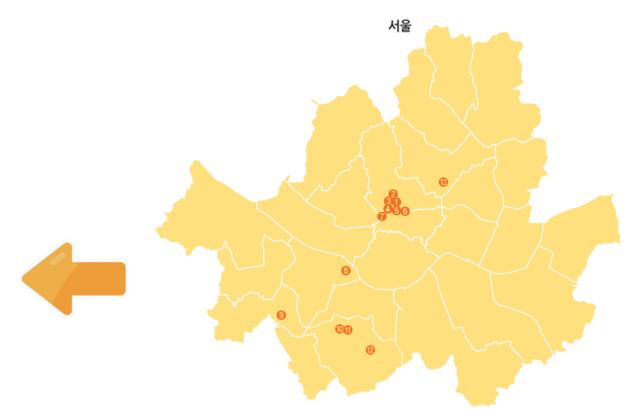
가입함으로써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경제사회이사국 이사국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제56차 유엔 총회의를 수임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박기문 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2016년까지 유엔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국제 무대

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2018년 12월 기준 91개에 달하는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하여 경제 협력, 자원 개발, 국제 개발 협력, 질병 관리,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자 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11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세계기상기구(WMO)	195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12	파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국제노동기구(ILO)	1991
		세계무역기구(WTO)	1995
		세계보건기구(WHO)	1949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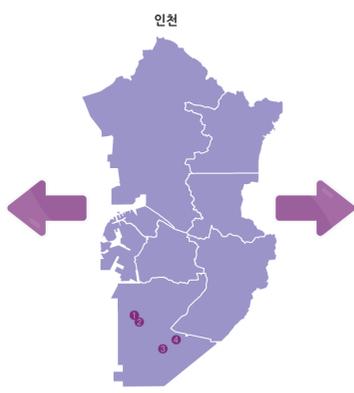
국제기구 유치 현황

1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1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1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서울사무국	
2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3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4 한-아세안센터	
6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7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사무국	
6 유네스코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6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한국투자진흥사무소	
1 유엔세계식량계획(WFP)한국사무소	
2 국제백신연구소(IVI)	
5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1 유엔거버넌스센터(UN POG)	
1 유엔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1 UN기탁도서관(송도국제기구도서관)	
1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사무국	
1 유엔동아시아환경 협력프로그램(UN NEASPEC)사무국	
1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1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사무처	
1 황해광역생태계보전 사업(YSLME)사무국	



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송도사무소	
1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 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1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1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UN ISDR)동북아시아 사무소	
2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6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4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1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2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	
6 유엔기념공립국제관리 위원회사무소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APEC)기후센터	
6 아세안문화원(ACH)	
6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사무국	

사람, 물자, 정보 등의 국경 간 이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들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장이 국제기구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유치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기구 관련 업무는 각종 국제회의의 등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고도의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천시 10개, 서울시 6개, 부산시 3개 등 총 19개의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국과 17개의 국제기구 지부를 유치하였다. 인천이 유치한 국제기구로는 유엔 거버넌스센터(UN POG), 유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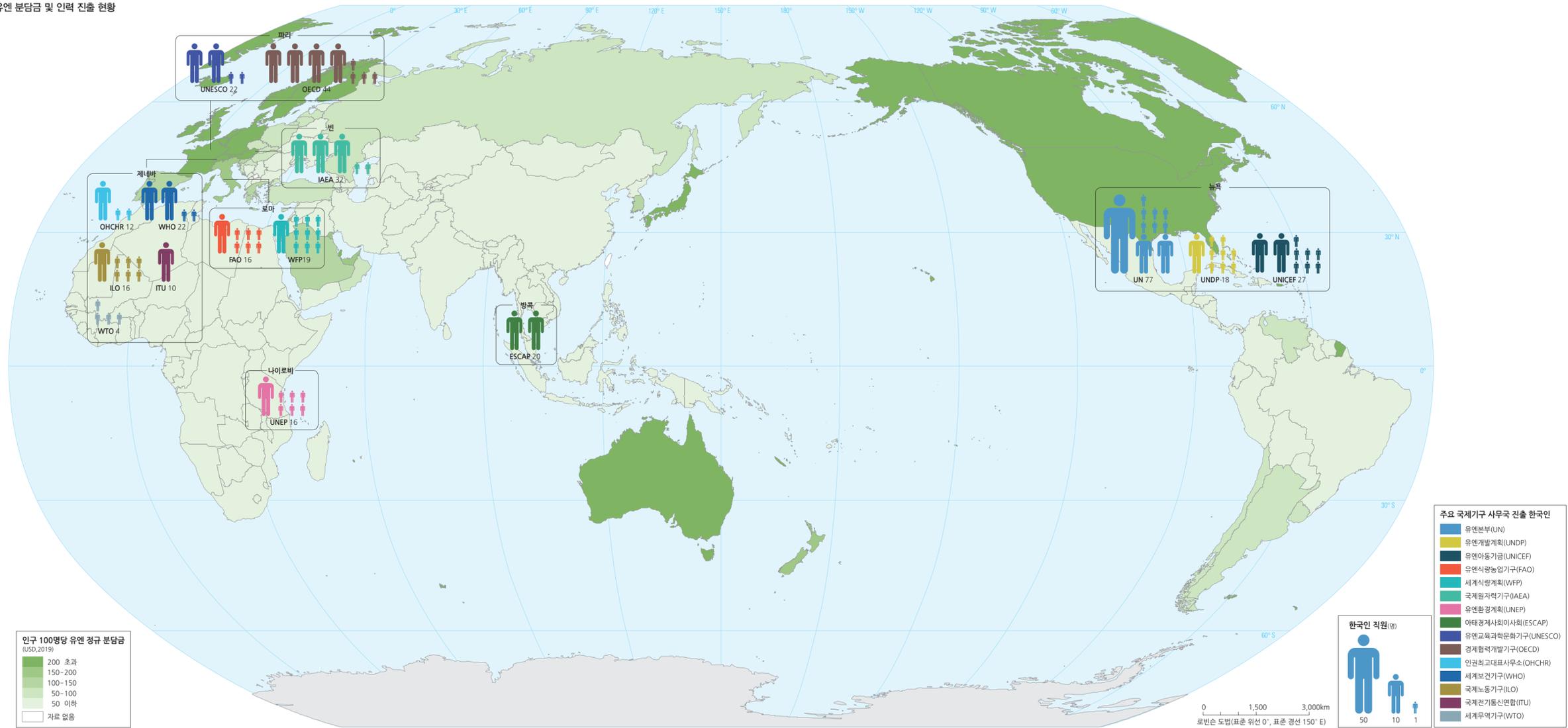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UN 기탁도서관(송도국제기구 도서관),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사무국,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유엔 동북아시아환경협력프로그램(UN NEASPEC)사무국,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UN OSD),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사무처,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사무국 등이 있다.

서울에는 국제백신연구소(IVI), 한·아세안센터, 한·중·일협력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이 있으며, 부산에 재한유엔기념공원(UN MCK),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아세안문화원

(ACH)이 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7년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개발 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빈발하는 질병 퇴치를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결정하여 설립되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 도상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유엔 관련 활동

유엔 분담금 및 인력 진출 현황



주요 국제기구 전문직 이상 현황

유엔 사무국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유엔 본부	77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20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12
합계	109
유엔 산하 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유엔개발계획(UNDP)	18
유엔환경계획(UNEP)	16
유엔아동기금(UNICEF)	27
세계식량계획(WFP)	19
합계	80
유엔 전문 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6
국제노동기구(ILO)	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0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22
합계	64
유엔 협력 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32
세계무역기구(WTO)	4
합계	36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4
합계	44
기타 기구	
국제기구명	진출 한국인 수
기타 기구	238
합계	238
총합계	
	571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정규 예산(UN Regular Budget)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은 2년 단위로 편성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되는데, 이는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총당된다. 개별 회원국의 분담률은 매 3년마다 18개국으로 구성된 분담금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총회 제5위원회에

서 결정된다.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민 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비례하는데, 외채 부담이 큰 경우 연간 국민 소득을 외채 상환액만큼 축소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각국의 분담률은 22%를 넘지 않고 0.001%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분담률이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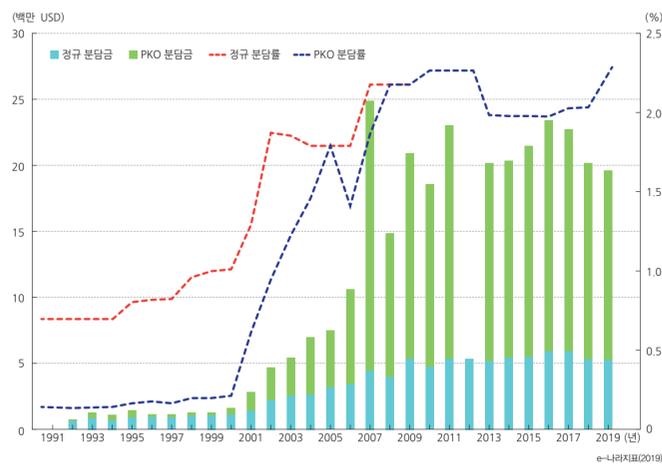
0.69%에서 2019년 2.267%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도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본부가 소개한 도시별로 나타낸 것이다.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뉴욕, 파리, 제네바 등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본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서 활동하고 있다. 표는 국제기구에서 전문직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 현황을 유엔 체계 기구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2019년 현재 7개 유엔 평화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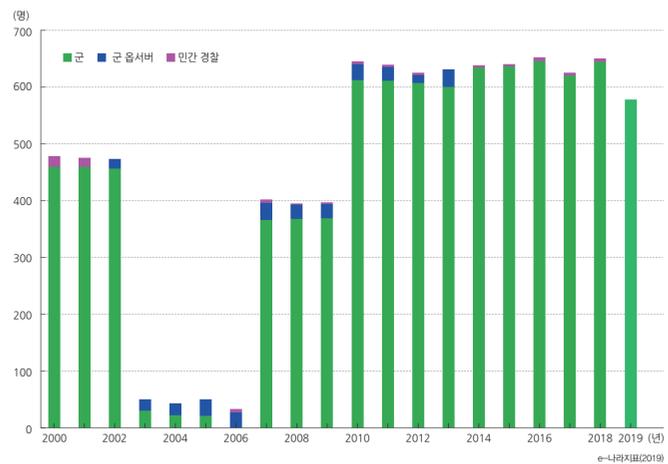
지활동 임무단에 총 580명을 파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 동명부대 280명, 남수단 한빛부대 278명,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7명, 남수단임무단(UNMISS) 7명, 수단다푸르임무단(UNAMID) 1명,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4명, 서사하라선거감시단(MINURSO) 3명을 각각 파견하여 평화 정착, 정전 감시, 재

건 지원, 평화 협정 이행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PKO 예산 분담률은 정규 분담률과 마찬가지로 2.267%로 유엔 회원국 중 11위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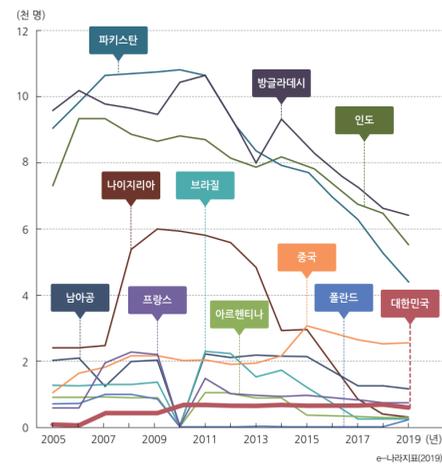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유엔 분담금 액수 및 분담률 추이



PKO 파견 인력 추이



주요 국가별 PKO 파견 인력 수 추이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 유지군 파견 현황

